

작년 축산물생산액 10조8천억원 달해

축산물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앞지르면서 축산업이 농촌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4년 축산물 생산액은 10조8,399억원으로 쌀 생산액인 9조9,631억원보다 8,768억원이나 많아졌다.

축산물 생산액은 1980년에는 1조2,273억원으로 쌀 생산액의 56%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00년은 8조824억원으로 쌀 생산액의 77%를 차지했다.

특히 2003년엔 처음으로 쌀 생산액을 앞지르기 시작, 이 해 축산물 생산액은 8조8,696억원으로 쌀 생산액(8조8,359억원)을 근소한 차이(337억원)로 앞섰다.

또 축산물은 품목별 생산액 중 상위품목에도 대거 진입했다. 2004년의 품목별 생산액은 돼지가 3조6,668억원으로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한육우 3위(2조8,937원), 우유 4위(1조5,157억원), 달걀 5위(9,883억원), 닭 7위(9,476억원) 등이다.

이처럼 최근 축산물 생산액이 증가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등에 따라 축산물값이 호조를 보인 데다 국내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돼지값(100kg)은 23만5,000원으로 값이 비교적 좋았던 1999년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함께 축산분야의 전업화·규모화가 크게 진전된 데다 최근 사육마릿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한우의 경우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한때 생산기반까지 흔들렸지만, 고급육 생산확대와 유통차별화로 이를 극복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새로 한우사육에 진입하는 농가들이 있을 정도로 생산기반이 안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축산물 생산액도 그 동안 산지 축산물값이 호조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액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물 생산액이 쌀 생산액을 앞서는 추세는 이번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전반적으로 산지 축산물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축산물 생산액 증가는 주춤해질 수도 있는 만큼, 고급육 생산 등 마리당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2005. 12. 9〉

축산식품관리 행정, 왜 식약청으로 넘기려하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 소속 40개 회원단체들은 지난 5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식품안전행정체계 논의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김근태 복지부 장관을 향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축단협과 농단협은 축산식품행정업무가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고 있음에도 축산물안전관리를 식약청으로 넘기려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축산인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규정, 강력 성토했고 나섰다.

양대 단체는 이날 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선진국의 사례나 축산물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공 등 국내외 경험을 보더라도 이제는 일반 농산물도 포함한 모든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예방·일관·효율성 있는 식품관리체계로의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지난 98년 축산물가공업부가 농림부로 환원될 당시 국회의원으로 찬성 서명을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의사를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냐고 물었다.

더욱이 식약청은 기준도 없는 기생충알 김치사건을 일으켜 놓고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복지부가 축산물마저 식약청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인 만큼 가공전 식품의 원재료 안전성에 대해서는 생산부처인 농림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데 대해 장관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열린우리당 대권후보로 당연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이면 정치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과연 복지부가 추구하는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김 장관의 대권후보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한편 축단협은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축산식품 관리가 잘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식약청으로 축산식품 업무를 가져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력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축산신문 2005. 12. 7〉